

##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기념일 활용에 관한 연구: ‘반공’국민을 만드는 국민의식(國民儀式)\*

강정인 | 서강대학교

한유동 | 서강대학교

### | 국문요약 |

이 글의 목적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기념일에 행한 연설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기념일이 ‘반공’국민 형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6·25전쟁과 관련된 국가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남한주민들에게 ‘반공주의’를 지속적으로 주입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민족기념일인 삼일절과 광복절에 6·25전쟁의 경험, 즉 전쟁 당시의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상기시키면서 ‘반공’의식을 민족의식과 연결시켰다. 이를 통해 반공주의는 자연스럽게 남한주민들에게 내면화되었다. 결국 1950년대 국가기념일은 반공주의 담론이 핵심을 이루면서 ‘반공’국민을 만드는 국민의식(國民儀式)을 거행하는 날로 전환되었다.

주제어 | 국가기념일, 민족기념일, ‘반공’국민, 이승만, 6·25전쟁, 반공주의, 민족, 이념적 동질성

\* 이 연구는 2012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201210033.01).

## I.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기념일에 행한 연설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기념일이 ‘반공’국민형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유럽의 근대 국민국가(이하 국민국가 혹은 국가) 형성과정에서 등장한 국민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정치적 주체집단으로 상상된 존재, 즉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였다. 이 국민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닌 “공동의 의지”를 지닌 공동체로 “모든 것에 앞서 존재하며”, “모든 것의 원천”으로 그들의 “의지는 언제나 합법적이며, 그것은 법 그 자체”였다(Sieyès 1789, 180; 최갑수 1999, 114-115에서 재인용).<sup>1)</sup> 그런데 국가들은 거주민을 ‘공동의 의지’를 지니며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인 ‘국민’이라는 집단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수단-보통교육제도의 실시, 국사편찬과 역사교육, 징병제도, 국가 기념일의 제정과 활용, 기타 다양한 문화정책 등-을 활용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별다른 차이 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 정권은 대한민국 초기에 남한주민들을 자신들의 목적에 순응하는 국민, 즉 ‘반공’국민<sup>2)</sup>으로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sup>3)</sup> 물론 이러한 언급이 제1공화국 당시 남한주민들에게

1) 시에예스의 글은 로베르토(Roberto Zapperi)가 1970년에 편집한 인쇄본에 들어있다 (Zapperi 1970).

2) 이 글의 목적과 직접 연관이 없기에 자세히 논하지 않겠지만, 박찬승은 “1950년대 이승만 정권에서 권력을 장악한 정치인과 관료, 군인, 경찰들”은 “극단적인 반공주의, 반북주의를 내세우면서 민족주의를 억압”했는데, 특히 6·25전쟁 이후 1950년대에 걸쳐 “남북한 [이] 서로를 극단적으로 적대시”함에 따라 남한에서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논의는 당분간 실종”되었다고 지적한다(박찬승 2010, 232). 따라서 좌파를 연상시키는 오염된 ‘민족’이라는 용어 대신 “오직 남한 정권을 향한 충성”을 의미하는 “국가”나 “국민”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었다(슈미드 2009, 595). 이 점에서 이승만 정권기에 널리 사용된 ‘국민’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반공’이 함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유럽에서 근대국가와 민족이 거의 동시에 형성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민족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대국가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그 근대국가는 전체 민족을 대표하지 못했다. 곧 이승만 정권은 분단국가의 정부로서 일제로부터 해방 후 한민족이 원했던 통일국가의 정부가 아니었기에 정부수립 초기 이승만 정권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지지도/충성

반공주의만이 유일하게 강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화 이전 한국 정치는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중적 정치 질서의 중첩적 병존’”이라는 이념적 특징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규범적 질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반공과 나란히 역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 정권 역시 “반공을 주장하더라도 단순히 권위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반공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쳐야만 했다.<sup>4)</sup> 즉 자유민주주의는 일정 정도 이승만 정권에 의해 남한주민들에게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이승만 정권의 교육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1공화국의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반공주의’를 내면화시키는 일이었다. 따라서 “1950년대 반공교육은 개별 교과를 초월해 존재”했다(박형준·민병욱 2009, 2). 특히 이승만 정권은 『반공독본』과 『애국독본』이라는 초중학생용 반공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반공주의를 “내면화”하도록, 그리고 “민족의식”을 “자극”하여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채택했다(박형준·민병욱 2009, 9-16). 그러나 “1950년대의 민주주의 교육이 없이 4·19는 설명”될 수 없으며, “4·19는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실패 때문에도 왔지만 그의 정부의 교육의 성공 때문”(박명림 2006, 373)이라는 박명림의 지적처럼 이승만 정권 시절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허공에 뜬 구름’과 같은 이념은 아니었다.

교육제도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의 ‘반공’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는 공보선전활동과 문화영화, 국가기념일의 활용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이승만 정권은 정부수립 직후부터 6·25전쟁 동안 공보선전활동을 통해 남한주민들에게 반공주의를 형성시키고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김영희 2010). 이

---

심은 높은 편이 아니었다. 또한 북쪽에는 민족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남한 정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권이 들어서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국가적인 사건인 여순사건이 발생했다. 정권 초기에 일어난 여순사건은 불기한 군 좌익 세력에 남한의 잔존 좌익세력과 남한국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호응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그들은 해방 직후 좌익세력들이 세운 ‘인민위원회’를 여수지역에 설립하면서 대한민국을 친일 정부, 반민족 정부라 비난하면서 부정하였다(김득중 2009). 따라서 이승만 정권은 초기부터 국민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목적인 ‘반공주의’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국민을 만들고자 했다.

4) 이중적 질서의 중첩적 병존 및 반공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정인(2013, 281-283)을 참고하기 바란다.

승만 정권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공보활동의 목표는 “새로 수립된 정부의 시책과 방안을 널리 알려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공보행정 목표”였다(김영희 2010, 330). 하지만 이 시기에 이승만 정권의 공보활동에서 “실제 더 중시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개인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에 부응하는 공보활동”으로 “정전회담을 반대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한편 이승만의 정치적 입장을 국민이 지지하게 하고, 동원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 “정부수립이후 전쟁기간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전개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전쟁을 겪으면서 오히려 반공독재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김영희 2010, 330-331).

이승만 정권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생산해 낸 대국민 시청각 교육 프로그램”(이하나 2009, 552)인 문화영화를 통해서도 ‘반공’국민 만들기 기획을 수행했다. 정부수립기에 “정부는 대한민국이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임을 부각하기 위해 ‘민족’을 강조하는 영화들을 기획하고 장려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무엇보다 강조되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었다”(이하나 2009, 540). 6·25전쟁 동안에는 “‘군사’, ‘반공’의 키워드가 문화영화를 온통 뒤덮었다. 그런데 이때의 반공은 단순히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만은 아니었다”. 6·25전쟁을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대립으로” 설정하고 “남한은 자유진영의 선발대로서 공산진영과 싸우고 있다는 의미의 ‘반공’이었다”(이하나 2009, 541). “휴전 후 전후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에 문화영화의 주요 키워드는 ‘국토’, ‘재건’ 그리고 ‘대통령’”이었다(이하나 2009, 543). 그러나 이 시기에 제작된 “‘재건’에 관한 문화영화”도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미지 면에서 재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이하나 2009, 544).

위와 같이 이승만 정권은 남한주민들을 ‘반공’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국가기념일도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되었다.<sup>5)</sup> 국가기념

5) 이승만 정권 시기에 모든 국가기념일이 남한주민들을 ‘반공’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활용된 것은 아니다. 정부수립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신생국가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즉 “나라의 틀”을 확립하는 시기로 이승만 정권은 “근대화”에 힘을 쏟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국가기념일에는 국가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들도 반영되었다. 그렇다

일은 “의례와 달력이라는 두 개의 하위 형식”으로 구성된다. 의례는 “합창과 선서와 연설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민국가는 이를 통해 “국가의 존재이유와 이념적 토대를 상기해주고 국가와 국민의 심리적 통합을 유인한다”(하상복 2012, 113). 이와 더불어 “국가기념일의 특정한 명칭을 담고 있는 달력은 국민들이 국가이념을 환기할 것을 일상적으로 요청한다”(체롭바벨 2006, 365; 하상복 2012, 113에서 재인용). 이 점에서 국가기념일은 “일상성, 규칙성,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국가이념의 국민적 전파와 정당성의 창출에 작용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재현의 장치”였다. 그리고 이는 “국가 이념과 가치를 재현하고 유포하는 다른 장치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기념일 또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하상복 2012, 113).

국민국가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날인 국가기념일에 행해지는 의례는 과거와 연결되면서 더 한층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점에서 국민국가에서 만든 국가기념일의 의례는 홉스봄(Eric J. Hobsbawm)의 말처럼 “만들어진 전통”이다. 그에 의하면 “‘만들어진 전통’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통상 공인된 규칙에 의해 지배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례나 상징적 성격을 갖는 일련의 관행들”로 국가는 그것들에 “특정한 가치와 행위 기준을 반복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과거와의 연속성을 내포”시킨다(홉스봄 2004, 20). ‘만들어진’ 전통에서 과거와의 연속성은 “인위적”인 것, 곧 “전통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역설적이게도 예전 상황들에 준거하는 형식을 띠거나, 아니면 거의 강제적인 반복을 통해 제 나름의 과거를 구성한다”(홉스봄 2004, 21). 이처럼 홉스봄은 ‘만들어진 전통’이란 결국 “과거에 준거함을 특징으로 하면서 다만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공식화되고 의례화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홉스봄 2004, 25). 그러면서 그는 ‘만들어진 전통’들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밝혔다(홉스봄 2004, 33).

첫째, 특정한 집단들, 실재하는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공동체들의 사회 통합이나 소속감을 구축하거나 상징화하는 것들이다. 둘째, 제도, 지위, 권위

---

하더라도 근대화와 반공주의 사이의 관계를 간과할 수는 없다(김민환 1999, 54-60).

관계를 구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들이다. 셋째, 그 주요 목표가 사회화나 혹은 신념, 가치체계, 행위규범들을 주입하는 데 있는 것이다(홉스봄 2004, 33).

이처럼 국민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은 그 국가가 행하는 ‘만들어진 근대적인 의례’ 속에서 역사(과거)와 연결되면서 ‘우리’ 국민이라는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은 이승만이 남한주민들을 ‘반공’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국민의식(國民儀式)으로 국가기념일을 활용했다는, 즉 홉스봄의 언급처럼 국가기념일 행사를 통해 반공이라는 “신념”, “가치체계”를 “만들어진 전통”으로 확립하고자 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sup>6)</sup>

필자는 이 글에서 이승만의 국가기념일 활용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먼저 민족기념일인 삼일절과 광복절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정부수립 직후부터 남한 주민들에게 반공주의를 주입하기 위해 삼일절과 광복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두 기념일을 ‘반공’국민을 만드는 날로 변모시켰다. 다시 말해 이승만 정권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본래 민족기념일인 삼일절과 광복절을 국가기념일로 전환하여 남한주민들에게 마치 반공의식이 과거부터 내려온 민족의식이라는 상상을 가지도록 만들려고 했다. 이날들에 행해진 이승만 및 정부 주요 인사의 연설에서 반공주의는 과거(역사)와 연결되면서 ‘반공’국민이라는 정체성은 오래된(전통적인) 것이라는 의식이 남한주민들에게 소급적으로 새겨졌다. 이를 통해 이승만 정권은 단독정부 수립으로 인해 초래된 민족적 정당성의 결여를 보완하고자 했다. 또한 민족기념일에 반공주의가 강조되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사실과 6·25전쟁 당시와 이후의 민족기념일에서 ‘전쟁의 경험’이 언급되면서 이승만 정권의 반공선전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살펴볼 것

6) 이승만 정권에서 기념된 국가기념일을 국민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연구로는 임종명(2010)의 글을 들 수 있다. 임종명은 삼일절이라는 특정 국가기념일에 주목하여 삼일절을 통해 초기 이승만 정권이 남한주민들을 ‘대한민국의 충성스러운 자기희생적 국민’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한다(임종명 2010). 그러나 그의 연구의 초점은 필자와 다르게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반공주의와 국민형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다. 이어서 남한주민들에게 ‘반공’의식을 효과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게 도와준 6·25전쟁과 관련된 기념일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앞선 언급처럼 삼일절과 광복절부터 시작된 이승만의 반공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6·25전쟁을 치르면서 탄력을 받았다. 6·25전쟁을 통해 전체 남한주민들은 공산주의의 잔인한 모습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승만 정권은 6·25전쟁 이후에 각종 전쟁 기념일을 제정하고 의례를 거행함으로써 반공주의를 가일층 강력하게 주입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은 정권 초부터 단독정부의 결함을 만회하기 위해 민족기념일인 삼일절과 광복절을 활용하면서 분단의 책임을 북한에 미루는 등의 다양한 반공선전을 해왔는데, 6·25전쟁 이후에는 민족기념일에 전쟁의 기억을 언급하고, 각종 전쟁기념일의 제정과 의례를 통해 이를 더욱더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한 후 이승만 정권기에는 삼일절과 광복절 등의 민족기념일에 반공주의가 활용되었지만, 이후의 정권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이를 추후의 과제로 남기면서 마무리를 짓겠다.

## II. ‘반공’국민을 만드는 국가기념일

이승만 정권은 정부 수립 직후 1948년 10월 19일에 여순사건을 일으킨 공산반란분자들을 같은 민족을 죽이는 잔인한 자들이자 인간이하의 존재로 비난함으로써 대중적 차원에서 반공선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은 남한주민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은 더 이상 같은 민족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7)</sup> 이러한 사실은 대통령인 이승만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는 여순사

7) 김득중(2009), 임종명(2005)은 여순사건에 대한 당시 이승만 정권의 태도, 언론 보도, 문인들의 글을 분석하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의 범주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건을 일으킨 공산반란분자들을 동족상잔을 일으킨, 인간이 아닌 존재, 그리고 불순분자로 지적하면서 그들을 민족 내에서 ‘제거’해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순천(順天), 여수(麗水) 등지에 동족상잔한 진상을 들으면 우리 한족(韓族)으로는 과연 통곡할 일이다. ... [공산반란분자들이] 살인 충화(衝火)하는데 ... [공산반란분자들은] 살해, 파괴를 위주(爲主)로 하고 사생을 모르는 듯 덤비는 [그들의] 상태는 완전히 인간의 형태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외국 기자들도 이를 격분하기에 ... 정부에서는 ... 학교와 정부기관에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해야지] ... 만일 이에 우리가 등한히 하다가는 자상잔멸(自傷殘滅)로 사망의 화를 피할 자가 몇이 아니 될 위험성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불순배(不純輩)를 철저히 제거 반역사상방지 법령 준비” 1948/11/05).<sup>8)9)</sup>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처럼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남한주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잔인한 행동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에 공산주의자를 민족 내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이승만 정권 및 이승만의 의도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한계는 오래 가지는 않았다. 여순사건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부분의 남한주민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공산주의자들이 같은 민족을 죽이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0)</sup> 민족상잔인 6·25전쟁의 경험은

8) 본 논문에서 □ 안에 적힌 글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9) 본 논문에서 인용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http://www.pa.go.kr/online\\_contents/speech/speech02/presidentspeech\\_list.html](http://www.pa.go.kr/online_contents/speech/speech02/presidentspeech_list.html))를 참조했다.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이승만의 연설문 인용표시는 연설문의 제목과 날짜만을 적었다. 더불어 이승만의 연설문과 1950년대 문헌 등을 인용할 때 대부분 원문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어 표기하고(인용된 원문에서 ‘한글(한자)’로 표시된 경우나 원문의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한글(한자)’로 표시하였다) 맞춤법은 되도록 오늘날에 맞게 수정하였다.

10) 물론 6·25전쟁 당시 남한군인들도 남한주민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이로 인해 이승만



이승만 정권이 전쟁 후 제정한 국가기념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남한주민들에게 상기되면서 반공선전을 구체적으로 강화해 가는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전쟁의 경험 때문에 반공은 더욱더 남한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국가기념일을 통해 시도한 ‘반공’국민 만들기 기획은 이승만이 정부수립 직후부터 삼일절과 광복절에 행한 연설에서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 수립 초기부터 반공에 대한 이야기를 민족기념일에 지속적으로 언급·삽입하면서 남한주민들에게 ‘반공’의식을 주입하고자 한 것이었다.

## 1. 민족의 기념일: 삼일절과 광복절

이승만 정권은 남한주민들을 ‘반공’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정권 초기부터 노력했다. 특히 정권은 민족의 이념적 동질성 강화를 중요시했다. 이념적 동질성이 강화될수록 남한주민들에게 혈연적 민족의 동질성은 약화되며 그 결과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으로부터 배제되어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의 공산주의자들을 민족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전략은 민족기념일에 적극적으로 수행되었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민족기념일이 오직 이러한 전략을 위해서만 활용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방 직후 당시 남한주민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삼일절과 광복절이었다. 삼일운동을 통해 ‘전 민족’은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염원을 분출했으며 광복절은 그 ‘민족적’ 염원이 이루어진 날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일절과 광복절은 “일제의 침략과 항일민족해방운동”을 강조하면서 ‘민족의식’의 고취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민족의 기념일이었다(서중석 2002, 145). 이는 해방 후 처음 맞이하는 삼일절과 광복절에 발표된 글에서 고스란히 표현되었다.

1946년 2월 26일에 신한민족당, 인민당, 공산당, 독립동맹, 조선민주당 등이

---

정권은 그러한 사실을 가능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려고 했다. 이 점이 이승만 정권의 ‘반공’국민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데에 대한 설명은 II-2에서 서술했다.

중심이 되어 설립된 3·1기념전국준비위원회는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기미 독립선언기념전국대회에 대하여 기념행사를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전단 1946b/02/26).<sup>11)</sup> 3·1기념전국준비위원회는 그 전날에 발표한 전단에서 삼일운동의 의의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3·1운동은 조선민족이 일본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자주독립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손으로 지은 피의 기록이었다는 의미에 있어서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첫 페이지를 빛내게 하는 민족적 항쟁인 동시에 불멸의 기념탑을 이루었던 것이다(전단 1946a/02/25).

해방 후 처음 맞이하는 광복절에 한 언론사는 그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8·15기념일은 일제철쇄에서 3천만 민족이 해방되어 본연의 문화민족 자유민으로서 자기창조와 자아발전의 『모멘트』를 재인식함으로써 재전비약(再轉飛躍)을 기하는 데에 회고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동아일보 1946/08/16, 1).

이러한 삼일절과 광복절에 대한 인식은 전 민족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해방 직후인 1946년의 삼일절과 광복절은 좌우가 공동으로 기념해야 한다는 전 민족의 압력이 강력했다.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좌우파는 각각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1946년부터 삼일절과 광복절에 “통일된” 기념식을 거행하지 않았으며, 각 진영들은 그날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경합”을 벌였다(김민환 1999, 27-40). 그런데 단독정부 수립 후, 남한에서는 이승만과 우익이 두 기념일의 행사를 독점하였다. 그들은 비록 독립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를 설립하였지만 통일된 민족국가가 아니었기에 정치적·민족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은 ‘민족기념일’을 국가의 소유로

---

11) 본 논문의 본문 및 각주에 인용된 관보 호외, 전단, 신문(출전에 신문의 면수가 적힌 경우는 제외) 등은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홈페이지(<http://db.history.go.kr/url.jsp?ID=dh>)를 참고했다.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국가는 민족기념일을 소유함으로써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민족 공동체에 대한 대중의 열광적 지지를 극대화하고 대중을 그 민족 공동체 안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나인호·박진우 2005, 205).

이승만 정권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1949년 10월 1일을 기하여 삼일절과 광복절을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한다는 목적하에 ‘국경일’로 제정(관보 호외 1949/10/01)하면서 공식적으로 민족의 기억을 국가의 기억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의 ‘새로운 민족 공동체’인 ‘반공’국민으로 남한주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민족이 기억하는 날을 사용했다. 즉 이승만 정권은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민족기념일에 반공을 강조하고 남한주민들이 반공주의를 내면화하도록 만들어 민족적 동질성을 ‘반공’이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집약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삼일절과 광복절을 국가기념일로 전환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승만이 그 역사적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 행한 연설에서 이미 상당히 강한 반공의식의 표출을 감지할 수 있다. 그는 정부수립 전인 1948년 삼일절 행사에서 당시 ‘우리’ 민족인 북한주민들은 공산주의의 지배로부터 핍박받기 때문에 하루 빨리 북한주민들을 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북동포들은 사지에 빠져 하루가 10년같이” 우리가 그들을 “살려낼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아무 것도 않고 방임하고 있다면 이는 인정도 아니요 동족상애의 도리도” 아니다(동아일보 03/02).<sup>12)</sup> 1948년 이승만의 광복절 연설에서도 ‘반공’을 발견할 수 있다. 1948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일로 이날에 이승만은 “8월 15일 오늘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지 그렇지 않고 “공산분자의 파괴적 운동”을 “해결할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다른 방식이 없다고 생각”을 가지면 안

12) 이날에 행해진 이승만 연설의 주목적은 단정수립을 삼일운동의 정신과 연결 지어 단정수립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것이었다(김민환 1999, 34). 이 점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남한국가를 민족의 역사에 연결하고 있었다.

된다고 언명했다(“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우리의 각오” 1948/08/15). 이처럼 민족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전환되기 전부터 이승만은 삼일절과 광복절 연설에 반공의 논조를 등장시키면서 반공을 민족/민족정신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승만의 그러한 시도는 민족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전환되는 1949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승만은 정부수립 후 처음 맞이하는 1949년 삼일절 연설에서 “30년 전 오늘에 13도 대표인 33인이 비밀히 모여서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탄생을 세계에 공포하였든 것”으로 “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민주국은 탄생한지 아직 일년이 못되었으나 사실은 30세의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기원을 ‘민족의 기억’에서 찾으려 하면서 대한민국과 민족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지니는 민족적 동질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존재한 것임을 표현하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산반란은 정부의 힘으로만 저지키 어려운 것이니” 모든 남한주민들이 “열렬한 애국심을 발휘하여 삼일정신을 부활함으로써 능히 우리 단체도 보존하고, 개인생명도 보존하며, 국권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언명함으로써 삼일절을 반공정신, 반공주의와 연결시켰다(“국가 민족을 수호하라” 1949/03/01).

이승만은 ‘민족의 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광복절에도 반공주의를 강조하였다.

우리 광복의 기념을 축하하는 기쁨은 이북동포들이 우리와 같이 다시금 완전히 합동되기 전에는 충분한 기쁨이 못될 것입니다. 우리가 4천여 년 동안 한족속 한단체로 지내기를 세계에 가장 단결된 모든 민족 중에 하나로 인증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산당들이 갈러 놓아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형제자매끼리 단결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오직 38경계선을 침범하거나 어리석은 동포가 공산당 선전에 빠져서 우리 정부를 전복 하지는 등 난동분자들은 누구나 이를 저제하기에 어데 까지던지 퇴보치 않을 것입니다(“정부수립 일주년 기념사” 1949/08/15; 원문 그대로).

이상과 같이 이승만은 삼일절은 물론 광복절에도 반공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남

한주민들이 ‘반공’의식을 내면화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우리 독립의 첫 기념임을 또 다시 외치나니 이것은 우리의 오랜 역사에 우리가 자유민임을 다시 기록하는 것”이며 “4천여 년 유전한 조국으로서 새 민주제도를 성립하는 간단한 역사를 우리가 쓰고 있는 중”이라고 언명하였다(“정부수립 일주년 기념사” 1949/08/15). 즉 그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독립한 날에 대한민국이 단순히 새로운 국가(공동체)가 아닌 과거부터 이어져온 역사적 공동체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반공주의’가 민족이 과거에 지녔던 정신 및 역사와 연결되면서 남한주민들에게 ‘반공’국민(민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닌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과 같은 익숙한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새로운 공동체’를 과거와 연결시키려는 이승만의 의도는 국민국가가 자신들의 ‘만들어진 근대적인 의례’ 속에서 거주민들을 과거와 연결시켜 ‘우리’ 국민이라는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구한 것으로 만들려는 전략을 따른 것이었다. 또한 민족기념일에 국가가 추구하는 원리인 반공주의가 주장됨으로써 반공이 국가의 주장이 아닌 마치 민족의 주장처럼 남한주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주입될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1945년 온 민족이 다함께 해방을 맞이했지만 38선을 경계로 한 미소 양군의 분할점령과 이를 고착시키는 사태전개에 따라 1948년 남한단독정부 수립과 뒤이은 북한정권의 수립으로 인해 남북한에 사실상 두 개의 국가가 병립하고 민족정통성의 계승을 위해 상호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 정권은 해방이후 본래 거족적인 민족의 기념일로 출발했던 삼일절과 광복절에 반공을 강조하고 반공민주주의를 부식시켜 덧씌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애초의 민족기념일은 ‘대한민국’의 반공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국가기념일이 되었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 시대에 ‘반공’은 민족주의와 결합되면서 남한주민들의 마음속에 국민의 증표로서 깃들어 갔다. 정부수립 후 처음 맞이한 민족기념일에 남한주민들에게 ‘반공’의식을 강조하여 주입하려는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 계속되는 삼일절이나 광복절 기념식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은 물론 전쟁 당시와 그 후에도 지속되었다. 다만 6·25전쟁 당시와 이후의 민족기념일이 전쟁이전과 다른 점은 ‘전쟁’ 및 그것과 관련된 기억들을 이승만은 물론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언급하면서 반공선전을 더욱더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2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삼십삼 년 전 오늘인 1919년 삼월일일에 우리애국지도자 삼십삼 대표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여 이를 세계에 공포”하였는데 “그때에 공포된 독립의 정신이 실지 상으로 출현”한 것이 “1948년 팔월에 대한민국 주국(主國)이 탄생된 것”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민족기념일에 남한국가를 연결하였다. 이어서 그는 “지금에 우리는 이 독립을 유지하며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로부터] 혈전사수”함은 물론 “세계 모든 민주국가들의 선봉이 되어 집단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사투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독립과 우리 안전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민주국가들의 원수인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라고 언명하면서 새롭게 민족기념일에 ‘전쟁’의 내용을 추가했다(“이대통령 3·1절 기념사” 1952/03/01). 1950년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조병옥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민족기념일 연설에서 피력했다. 그는 1950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금년 8월 15일은 해방 후 5주년이 되는 날이요 대한민국이 탄생한지 두 돌이 되는 거룩한 날”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과 “민족이 스스로의 얼을 다시 찾고 일제의 죄사슬에서 해방된”<sup>13)</sup> 민족의 기념일인 광복절을 “거룩한 날”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둘을 동일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만고역적 김일성 도배가 반기를 든 뒤 피로써 이 강산은 물들었고 불로써 이 나라의 부가 파괴”되었지만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함에 있어서 신념과 희망을” 가져 6·25전쟁을 승리함은 물론 “전화위복의 격으로 이 전란을 계기로 하여 국토통일의 대사업”을 완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되면 “우리민족의 전도는 과연 양양(洋洋)”하다고 그는 덧붙였다(대구매일 1950/08/15). 6·25전쟁 이후 맞이한 삼일절도 민족정신과 반공주의를 연결시키는 날이었다. 1951년 3월 1일 대구에서는 “삼천만 겨레[가] 일제에서 분연 꺾기하여 조국독립을 거족적으로 고함쳐 배달족의 엄연한 존재와 순고한 정신을 세계에 선포”(경향신문 1951b/03/02)한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대구시 주최로 3·1절 기념 시민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국제적 강도이며 인류의 공적(共敵)인 중공 및 북한괴뢰군을 전멸시키는데 전력을 경주할 것을 맹서”하자는 반공적 성향과 그 반공을 ‘삼일정신’과 결부시키는 “우리는 3·1정신을 계승하여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각까지 멸공성전에 돌진할 것을

13) (동아일보 1957/08/16, 1)

맹서”하자는 결의문이 발표되었다(대구매일 1951/03/02).

휴전 후에도 거족적인 기념일인 삼일절과 광복절에 “북진통일 성업을 완수하고 삼십오 년 전 바로 이날 피를 뿜으며 조국의 독립을 외치다 쓰러진 선열에 보답하자”(동아일보 1954/03/02, 2), “우리는 우리의 전 역량을 기울여 조국의 반공통일성업을 하루 속히 이룩함으로써 중흥위업의 승리적이며 영광스러운 또 하나의 광복을 성취 시켜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 조국의 영광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단결된 힘을 모아 통일전선에 나서”(이기봉 1957, 1)자는 반공주의적인 북진통일이 강조되면서 ‘반공’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삼일절과 광복절에 반공이 강조되면서 민족경축일은 ‘민족’=‘남한 국민’, ‘민족’≠‘공산주의자’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날로 변화해 갔다. 이 점에서 6·25 전쟁을 전후로 하여 민족기념일에 반공을 적극 강조하는 이승만 정권의 모습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같은 민족을 잔인하게 죽인다’는 이승만 정권의 주장이 전쟁으로 확인되면서 전쟁 이후의 민족기념일에 반공을 강조하는 그들의 전략은 더욱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승만 정권은 민족의 기억을 기념하는 날들에 분단으로 수립된 남한국가를 ‘대한민국’이라는 결손 없는 온전한 공동체로 새롭게 강조하면서 구성원들에게 그 새로운 공동체는 마치 과거부터 이어져온 민족 공동체의 정당한 상속자이며 그리하여 민족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라는 상상을 심어 주곤 했다. 이승만 정권의 그러한 의도는 특히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에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했다는 사실과 앞서 인용한 이승만 및 조병옥의 연설에서 명확해진다. 이 점에서 단독정부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승만 정권이 정부수립일을 광복절과 동일하게 한 일 자체가 남한국가와 민족을 일치시키려 한 그들의 전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4)</sup> 이와 함께 민족의례를 국가가 주재함으로써 이승만

14) 이는 앞서 인용한 1948년 8월 15일에 행한 이승만의 연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날의 연설문 제목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우리의 각오”로 그는 그 연설에서 “8월 15일 오늘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하여 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6·25전

정권의 이념과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민족의 역사적 기억과 연결되고 통합되었다. 이를 통한 이승만 정권의 목적은 국가의 주민들이 새로운 국가 공동체에 대해 이질감보다 동질성이라는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선전하고 연출한 ‘국가 공동체’에 구성원들을 편입시키는 일이었다. 결국 이승만 정권은 남한주민들을 집단적인 민족 기념의식에 불러들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반공’의식을 무의식중에 내면화하여 서로를 같은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로 확인하면서 동질성을 형성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이처럼 국가는 거주민들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 등을 민족기념일에 적극 강조함으로써 ‘민족의례’를 ‘국민화의 의례’로 만들었다.

## 2. 6·25전쟁과 관련된 국가기념일

삼일절과 광복절이라는 민족의례는 비록 좌우파 간의 정치적 투쟁이 있었지만 본래 반공과 연결될 필요가 없는 거족적인 기념일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논했듯이 정부수립 초기부터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민족기념일에 남한정부의 정통성과 반공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이승만 정권의 노력은 ‘6·25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을 겪으면서 ‘전쟁’이라는 주제가 전쟁 당시는 물론 그 이후의 민족기념일에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6·25전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 빚어진 참혹한 기억은 남한주민들을 ‘반공’국민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거국적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었기에 이승만 정권에게 그 전쟁을 활용하는 일은 중요했다. 공산주의자가 저지른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동으로 인해 겪은 뼈아픈 전쟁의 경험은 남한주민들을 계속해서 ‘반공’국민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6·25전쟁’이라는 기억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 전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 제정함으로써 그 기념일들을 민족기념일과 더불어 남한의 반공국민 만들기에

---

쟁 발발 당년의 광복절 기념사에서에서도 이승만은 “금년 8·15 경축일은 민족독립 제2회 기념일”이라고 언급하였다(“기념사, 제2회 광복절을 맞이하여” 1950/08/15).



사용할 것이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6·25전쟁과 관련된 기념일은 6·25전쟁 개전일인 6월 25일이었다. 전쟁발발일은 전쟁을 통해 겪었던 여러 기억 중 이승만 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이날에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상기시켰다. 이승만 정권은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6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6·25전쟁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 2년째인 1952년부터 정부는 6월 25일을 공식적으로 기념하였다. 정부부처인 공보처의 산하 기관으로 조직된 선전대책중앙위원회<sup>15)</sup>는 1952년에 “과거의 각종 행사가 각 주최자의 견해에 따라 그 실천면이 구구함에 비추어 금반 6·25 사변 2주년 기념행사를 전국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행사의 명칭을 ‘6·25 멸공통일의 날’로 통일”하기로 결정하였다(동아일보 1952/05/27, 2). 6·25전쟁이 발발한 날을 ‘멸공통일의 날’로 표현했다는 사실에서부터 이승만 정권이 6·25전쟁을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닌 이념 간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25전쟁 개전일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이전부터 이승만은 1951년 6월 25일에 전쟁 1주년 연설을 행하였다. 그 연설에서 이승만은 6·25전쟁은 “1년 전 오늘에 공산괴뢰군이 오래 동안 계획”하여 “아무 핑계 없이 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쟁에서 “우리 한인들은 자유민으로 죽을지언정 남의 노예 백성으로는 살지 않겠다는 결심”하여 “우리 평민과 군인들이 각각 가진 것을 다 사용해서 세계 모든 자유민의 원수를 일심으로 오늘까지 싸워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승만은 6·25전쟁 1주년을 당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공산괴뢰군이라 부르고 ‘적’으로 간주하면서 남인 소련 공산주의자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 ‘우리 한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임했다고 연설하였다.<sup>16)</sup>

15) 선전대책중앙위원회는 “1948년 11월 18일 대통령령 제35호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의 기본정강의 천명, 정부시책의 선전, 민심의 개발 기타 선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기구이다(김영희 2010, 335).

16) 이승만은 6·25전쟁 당시 “우리가 하루를 더 연명하기 위해서 공산군에 항복한다든지 하루 더 잘살기 위해서 오늘 중국과 같이 소련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남의 노예로서는 결코 살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죽기로서 싸워”왔다고 한 점에서 그가 말하는 ‘남’이란 소련임을 짐작할 수 있다(“육해공군 합동추도일 추도사” 1952).

그는 같은 연설에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공산괴뢰군을 다 타도시키고 자유로 살 수 있든지 그렇지 못하면 이와 같이 싸우다” 죽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민족 내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해야 함을 언명하였다(“6·25사변 제1주년에 제하여” 1951/06/25). 이뿐만 아니라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한국인들이 한번 다시 유일한 독립정부 밑에서 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자유로 살게 될 때까지는 이 전쟁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요청하는 바요, 우리가 또 우리 민족에게 이것을 맹서했으므로 지켜나가야만 될 것입니다(“6·25사변 제1주년에 제하여” 1951/06/25).

그리고 그는 ‘우리’ 민족은 “유일한 독립정부”인 대한민국에서 “한 백성”인 동질성을 띠는 국민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6·25사변 제1주년에 제하여” 1951/06/25). 이승만에게 ‘우리’ 민족은 ‘독립정부’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나아가 ‘공산괴뢰군’을 물리쳐야만 하는 ‘반공’국민이었다. 그가 6·25전쟁 발발 기념일에 보인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담론은 이후 다른 6·25전쟁과 관련된 기념일에서도 유사하게 강조되었다.

6·25전쟁이 휴전된 후 이승만 정권은 추가로 전쟁과 관련된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6월 6일 ‘현충일’, 9월 28일 ‘서울수복기념일’<sup>17)</sup>, 10월 1일 ‘국군의 날’<sup>18)</sup> 등이 추가된 전쟁과 관련된 기념일들이다. 이 중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날로 대대적으로 기념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1956년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6월 6일을 “거족적으로 국토수호에 바친 고인들의 거룩한 영혼을 추모”하기 위한 현충일로 제정했다(동아일보 1956b/04/16, 3). 여기서 말하는 ‘국토수호에 바친 고인들’은 6·25전쟁 시의 전몰장병들이었다. 현충일이 제정되면서 이전까지 육해공군 삼군에서만 시행되던 전몰장병을 위한 기념이 국가적 기념으로

17) ‘서울수복기념일’은 연합군과 한국군이 공산군에 서울을 점령당한 지 석 달여 만에 다시 서울을 찾은 것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18) ‘국군의 날’도 ‘현충일’과 마찬가지로 1956년에 제정된 기념일이다. 그날은 6·25전쟁 당시 국군 제3사단 23연대가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처음으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날이었다(강인철 1999, 248; 강준만 2004, 101).

격상되었다. 거국적인 기념일로 격상 된 현충일에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했다(동아일보 1956a/06/07, 1; 동아일보 1956c/06/06, 3).

이승만 정권은 1950년대 현충일의 주요 추모대상을 6·25전쟁 당시 사망한 전몰장병들로 한정하면서 애국은 반공이라는 인식을 그날을 통해 남한주민들에게 주입하였다.<sup>19)</sup> 이러한 모습은 이승만의 현충일 추도연설에서도 나타났다. 이승만은 그 연설에서 “공산침략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목숨을 공헌한” 것은 “자기 가족과 자손들까지도 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남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저의 나라와 자기들의 자유”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자유 국가들과 그 민중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제3회 현충전몰장병 중앙추도식에 추도시” 1958/06/06). 즉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 인해 ‘우리’가 노예가 되는 참혹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몰장병’들의 목숨을 바친 희생 덕분이었다. 그러므로 현충일에는 “국토방위와 겨레의 행복을 위하여 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용사들을 위하여 온 겨레는 고이 잠든 그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전 국민이 일제히 올렸다(경향신문 <석간> 1958a/06/06, 3). 이처럼 전 남한주민들은 전몰장병들을 위해 “경건하게 묵념”을 하면서 “동시에 멸공통일의 맹세를 새롭게” 해나갔다(경향신문 <석간> 1958b/06/06, 1).

반공의식과 더불어 멸공통일을 강조하는 모습은 6·25전쟁 발발 기념일, 서울수복기념일 및 국군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25일은 붉은 공산 이리 떼가 불법 남침하여 삼천리금수강산을 피로 물들이게 한지 일곱 돌날이다. 이날을 맞이하여 ... 수많은 학생,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 이날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멸공통일을 이룩할 것을 맹세하였다(경향신문 1957/06/26, 3).

19) 1950년대 현충일에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이 추모의 대상이었지만 1965년 3월 30일 국립묘지령(대통령령 제2092호)의 제정으로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애국지사, 경찰관 및 향토 예비군” 등으로 기념하는 대상이 확대되었다(국립서울현충원, 2005. 현충원 역사).

[http://www.snmb.mil.kr/mbshome/mbs/snmb/subview.jsp?id=snmb\\_070101000000](http://www.snmb.mil.kr/mbshome/mbs/snmb/subview.jsp?id=snmb_070101000000)

(검색일: 2013. 12. 02).

이제 우리가 9·28 수복 육 주년을 기념하는 까닭은 ... 앞으로는 더욱 큰 통일의 감격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침략 및 잔인한 적치하의 비절참절한 체험을 통한 적개심을 다시 깨물어 삼키고 휴전 삼년간에 이완될 수 있던 사기를 한번 다시 북돋아 통일로 재건으로 막진 하는 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경향신문 1956/09/28, 1).

오늘 1일은 제2회 ‘국군의 날’이다. 육이오 공산괴뢰의 불의의 침략으로 암흑 속의 90일을 겪는 동안 얼마나 강한 우리 국군의 육성을 통감하였던가! 그러기에 온 겨레는 ...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힘차게 자라고 있는 나라의 방패를 정성껏 받들어 실지회복의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는 것이다(경향신문 <석간> 1957/10/01, 3).

남한주민들은 1956년부터 현충일과 국군의 날이 제정되면서 현충일(6월 6일) → 6·25전쟁 발발 기념일(6월 25일) → 서울수복기념일(9월 28일) → 국군의 날(10월 1일)로 이어지는, 좀 더 자주 6·25전쟁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의례<sup>20)</sup>들을 가지게 되었다.

남한주민들은 이처럼 이승만 정권이 지정한 6·25전쟁과 관련된 기념일을 통해 6·25전쟁 시기에 겪었던 수많은 기억 중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 겪은 비참한 모습만을 상기하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이승만 정권은 기념의례를 통해 남한주민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만을 집단적으로 상기시켰던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기념일은 ‘통일’ 곧 ‘멸공통일’을 달성하자는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는 날이기도 했다. 결국 전쟁 관련 기념일은 남한주민들에게 모든 ‘공산주의자’는 물리쳐야만 하는 ‘적’이라는 반공주의적인 인식과 함께 멸공통일이라는 정권 나아가 공동체의 목적의식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날이었다.

20) 기념의례란 달력의례의 한 종류이다. 달력의례는 “끊임없이 재생되는 하루하루의 순환, 매달의 순환, 매년의 순환을 창출해 줌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명확한 구획을 설정해준다. ... 달력의례는 대강 세시 의례와 기념의례로 구분될 수 있다. ... 기념의례에는 그 날짜가 정확하든 그렇지 않은 간에 주요한 역사적 사건을 분명하게 회상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벨 2007, 206-209).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것처럼, 이승만 정권에게 6·25전쟁은 반공국민을 만드는 데에 ‘완벽한’ 재료는 아니었다. 북한군인들이 남한주민들을 잔인하게 죽이듯이 남한군인들도 남한주민들을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재료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의 전략에 방해가 되는 그 요소를 감추어야만 했다. 즉 6·25전쟁을 겪으면서 이승만 정권이 일으킨 학살, 곧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들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 ‘공식적인 기억’에서 배제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남한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불리한 사건/기억’의 대표적인 예로는 195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거창민간인학살 사건(이하 거창사건)을 들 수 있다.<sup>21)</sup> 거창사건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sup>22)</sup>으로 6·25전쟁 시 정권이 남한주민들에게 자행한 민간인 학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건은 6·25전쟁 기간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 중 사건 직후 가장 빠른 시간에 의회를 통해 공개” 되었으며 “진상조사를 통해 학살 및 사건 은폐관련 지휘관들이 처벌받은 사건이었다” (박명립 2002, 70).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거창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1960년 4월 19일 이전까지 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승만 정권에게 제대로 요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4·19 이후에야 피해자 가족들은 “거창지역을 포함해 경상 남북도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운동을 벌였으며, “피학살자 단체가 사건과 지역별로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유족회가 결성되었다”. 이처럼 4·19가 되어서야 피해자 가족들은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처리를 [국가에] 촉구”할 수 있었다(한성훈 2006, 222).<sup>23)</sup>

21) 필자가 ‘거창양민학살사건’ 대신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양민’이라는 용어가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설정해 ‘빨갱이’가 아닌 ‘양민’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거창사건을 다른 [민간인 학살]사건들과 차별화시키기” 때문이다(김기곤 2009, 45).

22)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5418호. 1996년 1월 5일 제정), (박명립 2002, 71에서 재인용)

23)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정권이 군사쿠데타로 들어서면서 거창사건 유족들은 다시 국가에 억압을 받았다. 전두환 군사정권도 거창사건에 대한 기억을 묻어 두려고 했다(한성훈 2006, 225-228). 거창사건이 비로소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명 받게 된 시기는 민주화 이후였다. 1996년에 “제정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

그렇다면 왜 거창사건은 남한군대에 의해 자행된 다른 민간인 학살보다도 남한주민들에게 빠르게 공개되었고, 사건과 관련된 자들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승만 정권을 물러나게 만든 4·19에 가서야 이루어 졌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거창사건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에 경도된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1951년 4월 24일에 정부기관인 공보처는 “내무·법무·국방 각 부에서” 벌인 거창사건에 관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발표에서 거창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 일대는 “8·15 해방 후 공비의 모략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면민은 공산주의에 감염되어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6·25 사변 후”에도 “공비 및 공비에 가담한 다수 면민의 습격”으로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당지 군수·경찰서장”이 “국군의 출동을 누차 진정하여” 그 지역에서 공비소탕을 위해 “군경 합동작전”이 개시되었다(경향신문 1951a/04/25). 이처럼 이승만 정권은 거창사건 이전부터 거창지역의 주민들을 공산주의자와 내통하는 ‘통비분자’들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거창사건도 이승만의 “동민들이 혹은 공산당원이든지 그 동정자이든지 다 협동해서 공산당기를 두르고 공산당노래를 부르며 함께 물러나간 고로 총살한”(“신대사 소환문제에 대하여 이대통령 담화발표” 1953) 사건이라는 말처럼 이승만 정권에게 그 사건은 ‘반공’국민이 되어야 할 남한주민들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적이었던 공산주의자들을 토벌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반공주의의 강조는 거창사건에 대한 군법정의 최후판결에도 영향을 주었다. 최후판결문에는 거창사건의 당사자인 남한군대가 “거창지구 공비잔멸의 전멸적 작전 및 국군운명에 중대한 의의”를 지녔지만 “[거창지구의] 공비토벌은 애국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국군작전 근본정신”을 지키지 않았고, “투항하는 적군은 의법처우하는 전장도의를 소홀히 하여 직결 처분이라는 국법명령을 부하군대에 하달함으로써 천부된 인권을 유린”했다고 서술하였다(경향신문(전선판) 1951/12/21). 즉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는 법정까지도 반공주의의 틀에 사건을 끼

---

법’에 근거”하여 거창추모공원이 “신원면 대현리 일대에” 조성되었다. 이는 “국가차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이자, 거창사건에 대한 집단보상의 성격을 갖는 사업”이었다(김기곤 2009, 40).

위 맞추어 해석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주장과 달리 거창사건에서 죽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여졌고, 그에 따라 “투항하는 적군은 의법처리 하는 전장도의를 소홀히 하여 직결 처분”한 것이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따라서 1950년대 반공주의가 지배하던 시절에 거창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이승만 정권이 피해자들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었기에 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요구할 수 없었다. 종국적으로 무고한 민간인의 학살로 밝혀졌지만, 거창사건은 당시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반공주의의 ‘해악’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반공주의의 ‘균림’을 확인하는 사건으로 기억되었다.<sup>24)</sup>

이와 같이 이승만(정권)은 6·25전쟁 후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쟁의 기억들을 주기적으로 기념하면서 남한주민들에게 ‘반공’국민이라는 정체성과 동질성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덮어 놓으면서 민족들이 그것을 망각하도록 독려했다. 마치 사람들이 원하는 경험만을 기억하고 싶은 것처럼 말이다. “현대의 민족은 한쪽 방향으로 모아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야기된 역사적 결과물”(르낭 2002, 63)이라는 르낭(Ernest Renan)의 주장처럼 이승만(정권)은 1950년대 남한주민들이 6·25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 ‘반공’국민이라는 한 방향으로 모아진 “역사적 결과물”이 되기를 원했다.

지금까지 이승만의 국가기념일 활용에 관한 검토에서 드러난 것처럼 1950년대 남한주민들은 국가가 선택한 기억과 민족이 선택한 기억의 기념의례의 복합으로 인해 종국적으로 삼일절(3월 1일) → 현충일(6월 6일) → 6·25전쟁 발발 기념일(6월 25일) → 광복절(8월 15일) → 서울수복기념일(9월 28일) → 국군의 날(10월 1일)로 이어지는 반공주의적 달력의례를 가지게 되었다.<sup>25)</sup> 그런데 달력에

24) 6·25전쟁 동안 발생한 남한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중 거창사건만이 이승만 정권하에서 다루어졌는데, 박명림의 지적처럼 “이 사건조차 실제적 진실규명의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거창사건이 이렇다면 다른 사건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박명림 2002, 70). 이처럼 이승만 정권에 불리한 전쟁의 기억은 남한주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드러났더라도 그 진상은 반공주의에 의해 가려졌다.

25) 강인철은 1950년대 남한에서 “3·1절(3. 1) → 현충일(6. 6) → 전쟁발발 기념일(6. 25) → 제헌절(7. 17) → 광복절(8. 15) → 서울수복기념일(9. 28) → 국군의 날(10. 1) → 개천절(10. 3) → 반공학생의 날(11. 23)로 이어지는, 1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가력’(國家歷)과 안정된 국가적 의례체계가 완성’되면서 “집단적·역사적 기억의 주기

표시된 순환적인 기념일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날의 숫자는 기독교의 각종 기념일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렇듯이 ‘의례의 시간’으로 남한주민들에게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재생시키고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상징과 같았다. 이 점에서 이승만 정권이 제시한 새로운 공동체인 ‘반공’국민은 마치 “외관 장식”과 같았다. 포이케르트(Detlev Peukert)는 “나치가 선전한 민족공동체를 외관 장식”이라고 했다. “외관이 으레 그렇듯이 그것은[나치의 민족공동체는] 인상적이었고 특히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힘이 있었으나, 사회적 현실 전체는 별반 나타내주지 못”했다(포이케르트 2003, 282). ‘반공’국민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도 공산주의자와 대한민국 ‘국민’을 구분하고 국가의 원리를 체득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지만 그것은 당시 남한사회에 산적한 사회문제인 가난과 부패라는 사회현실을 은폐하는 효과를 가졌다.

### III. 맺는 말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근대 국민국가에서 정치적 주체인 ‘국민’은 상상된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국가는 자신들의 영토 안에 있는 주민들을 국가이념에 적합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보통교육제도의 실시, 국사편찬과 역사교육, 징병제도, 국가 기념일의 제정과 활용, 기타 다양한 문화정책 등-을 시도했다. 특히 국민국가들은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인 ‘국가기념일’의 제정과 기념행사를 통해 국가의 경계 내에 있는 거주민들에게 집단적 동질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에게 민족의식과 국가귀속성을 주입·강화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이승만 정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정권은 교육, 공보활동, 그리고 문화영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남한주민들에게 반공주의를 주입시키고자 노력했다. 특히

---

적인 재생과 경축을 통해 민족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가 자체의 성화(聖化)를 안정적으로 기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봤다(강인철 1999, 248).



이승만 정권은 남한주민들을 ‘반공’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기념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다.

대한민국 수립 초기부터 이승만은 민족의 기억과 관련된 기념일인 삼일절과 광복절에 반공주의를 강조하면서 ‘반공’국민이라는 정체성과 동질성을 남한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흡수시키려고 했다. 이 ‘반공’국민은 6·25전쟁을 통해 남한주민들에게 더 이상 상상된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강압과 공포의’ 공동체가 되었다.<sup>26)</sup> 그러한 공동체를 6·25전쟁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은 국가기념일을 이용했다. 이승만과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남한주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 결정적 계기인 6·25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민족기념일에 언급하면서, 그리고 그 전쟁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일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반공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남한주민의 반공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했다. 정부가 지정한 6·25전쟁과 관련된 기념일은 전쟁기간 발생한 수많은 사건 중 남한주민들을 ‘반공’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적합한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이승만은 국가기념일에 반공주의를 강조하면서 같은 민족인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민족의 범주로부터 배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승만은 이념적 특성인 반공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념적’ 민족이라는, 곧 이념이 같아야 같은 민족이라는 담론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이승만 정권의 민족 개념에서는 이념이 혈통을 중층결정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sup>27)</sup>

지금까지 필자는 국민국가에서 국가기념일이 국가가 원하는 국민을 만들기 위

26) 6·25전쟁 당시에 이승만 정권은 도민증 및 시민증을 남한주민들에게 발급했다. 도민증과 시민증은 6·25전쟁 시에 남한주민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증표이었다. 다만 이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김영미(2007)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27) 중층결정은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가 주장한 개념으로 그는 “주로 경제, 정치 및 이데올로기라는 세 가지 요소들(또는 모순들)이 ‘상대적 자율성’과 ‘고유한 효력’을 유지하면서 복합적으로 역사의 변화를 결정하지만, ‘최종충위’에서는 ‘경제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중층결정이라는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의 틀을 넘어 비교적 느슨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강정인·정승현 2013, 5). 이 글에서도 이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이승만 정권에서 같은 민족이란 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혈통’이 아니라 ‘이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층결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정인·정승현(2013)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이승만이 국가기념일에 행한 연설을 통해 검토했다. 이승만 정권 이후에도 각 정권은 국가기념일에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남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동질성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각 정권마다 부식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목적과 거기에 부응하는 남한주민들의 추가적 정체성이 달랐기에 민족주의 이외의 다양한 담론들이 국가기념일의 행사 담론에 포함되었다. 다만 이승만 정권 이후 각 정권들이 국가기념일을 통해 남한주민들에게 심어주고자 한 ‘국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지면의 제약과 본고의 주제로 인해 추후의 과제로 남기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 강인철. 1999.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197-308. 서울: 백산서당.
- 강정인. 2013. 『넘나들(通涉)의 정치사상』. 서울: 후마니타스.
- 강정인·정승현. 2013. “한국 현대정치 이념적 지형: ‘민족주의의 신성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4호, 1-31.
- 강준만. 2004. 『한국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3권』.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김기곤. 2009. “국가폭력, 하나의 사건과 두 가지 재현: 거창사건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과정.”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1호, 27-63.
- 김득중. 2009.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서울: 선인.
- 김민환. 1999.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2007. “해방 이후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 주민등록증의 역사적 연원.” 『한국사연구』 제136호, 287-323.
- 김영희. 2010. “제1공화국 초기 이승만정부 공보선전활동의 성격.”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326-348.
- 나인호·박진우. 2005. “독재와 상징의 정치: 나치즘과 일본 파시즘의 정치 종교.”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2: 정치종교와 헤게모니』, 190-216. 서울: 책세상.
- 르낭, 에르네스트 저. 신행선 옮김. 2002. 『민족이란 무엇인가』. 서울: 책세상.
- 박명림. 2002.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사건’의 사례연구: 탈냉전 이후의 새 자료, 정신, 해석.” 『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 69-91.
- 박명림. 2006. “이승만 집권기 한국의 교육과 민주주의-교육혁명, 국민형성, 토크빌효과를 중심으로” 유영익 편.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331-373.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찬승. 2010. 『민족·민족주의』. 서울: 소화.
- 박형준·민병욱. 2009. “1950년대 반공교과서의 서술 전략 연구: 『반공독본』과 『애국독본』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3, 269-287.
- 벨, 캐서린 저. 류성민 옮김. 2007. 『의례의 이해: 의례를 보는 관점과 의례의 차원들』.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 서중석. 2002. 『비극의 현대지도자: 그들은 민족주의자인가 반민족주의자인가』. 서울: 성

균관대학교출판부.

- 슈미드, 앙드레 지음. 정여울 옮김. 2009.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서울: 휴머니스트.
- 이하나. 2009. “정부수립기~1950년대 문화영화와 국가정체성.” 『역사와 현실』 제74호, 519-557.
- 임종명. 2005. “여순사건의 재현과 공간(空間).” 『한국사학보』 제19호, 151-185.
- 임종명. 2010. “설립 초기 대한민국의 3·1절과 국민 생산.” 『역사학연구』 제38집, 351-388.
- 체툼바벨, 에비아타. 2006. “달력과 역사: 국가 기억의 사회적 조직화에 관한 비교 연구.” 제프리 K. 올릭 엮음. 최호근·민유기·윤영희 옮김. 『국가와 기억: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갈등·변화』, 363-384.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최갑수. 1999. “프랑스 혁명과 ‘국민’의 탄생.” 한국서양사학회 편. 『서양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107-153. 서울: 까치글방.
- 포이케르트, 데틀레프 저. 김학이 옮김. 2003. 『나치 시대의 일상사』. 서울: 개마고원.
- 하상복. 2012. “이명박 정부와 ‘8·15’ 기념일의 해석: 보수의 위기의식과 담론정치.”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2호, 109-132.
- 한성훈. 2006. “거창사건의 정치사회학적 분석: 기억의 정치와 학살의 승인.” 『사회와 역사』 제69집, 215-244.
- 흡스봄, 에릭. 2004. “서장.” 흡스봄, 에릭 외 지음.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17-43. 서울: 휴머니스트.
- Sieyès, Emmanuel Joseph. 1970. Zapperi, Roberto, ed., *Qu'est-Ce Que Le Tiers État?* Genève: Droz.

## 2. 정기 간행물

- 경향신문(전선판). 1951. “거창사건 군법회의 판정 이유서.”(12월 21일).
- 경향신문. 1951a. “공보처, 거창사건 진상 발표.”(4월 25일).
- 경향신문. 1951b. “대구시, 제33주년 3·1절 기념식 개최.”(3월 2일).
- 경향신문. 1956. “사설: 9·28 감격을 새롭게 하자.”(9월 28일), 1.
- 경향신문. 1957. “멸공통일을 맹세.”(6월 26일), 3.
- 경향신문 <석간>. 1957. “1일은 국군의 날 삼군서 다채로운 기념행사.”(10월 1일), 3.
- 경향신문 <석간>. 1958a. “6일은 제3회 현충일 영현의 명복기원.”(6월 6일), 3.
- 경향신문 <석간>. 1958b. “사설: 세췌번 현충일에 새롭게 하는 맹세.”(6월 6일), 1.

- 대구매일. 1950. “조병옥 내무부장관의 8·15 기념사.”(8월 15일).  
 대구매일. 1951. “3·1절 기념 대구시민대회 결의문.”(3월 2일).  
 동아일보. 1946. “해방기념일의 교훈.”(8월 16일), 1.  
 동아일보. 1948. “이승만, 3·1기념식에서 완전독립과 국권회복 역설.”(3월 2일).  
 동아일보. 1952. “육해공군의 모의전도 시행.”(5월 27일), 2.  
 동아일보. 1954. “충천한 경축의 환성.”(3월 2일), 2.  
 동아일보. 1956a. “거국적 행사를 거행 처음으로 맞은 현충일.”(6월 7일), 1.  
 동아일보. 1956b. “영현을 합동추모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4월 16일), 3.  
 동아일보. 1956c. “오늘 일회 『현충일』 팔만팔천주의 영영위훈추모.”(6월 6일), 3.  
 동아일보. 1957. “통일결의를 과시.”(8월 16일), 1.  
 이기붕. 1957. “반공통일에 박차.” 『동아일보』(8월 15일), 1.

### 3. 인터넷 사이트 및 기타자료

국립서울현충원. 2005. 현충원 역사.

[http://www.snmb.mil.kr/mbshome/mbs/snmb/subview.jsp?id=snmb\\_070101000000](http://www.snmb.mil.kr/mbshome/mbs/snmb/subview.jsp?id=snmb_070101000000)

(검색일: 2013. 12. 02).

국사편찬위원회. 2004. 자료대한민국사. <http://db.history.go.kr/url.jsp?ID=dh>

(검색일: 2012. 03. 01-11. 20; 2013. 12. 26.-12. 28).

대통령기록관. 2012. 연설문.

[http://www.pa.go.kr/online\\_contents/speech/speech02/presidentspeech\\_list.html](http://www.pa.go.kr/online_contents/speech/speech02/presidentspeech_list.html)

(검색일: 2012. 01. 05.-02. 10; 2013. 12. 21.-12. 27).

관보 호외. 1949.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10월 1일).

전단. 1946a. “3·1기념전국준비위원회 3·1절 기념행사의 통일거행제의.”(2월 25일).

전단. 1946b. “3·1기념전국준비위원회, 기념행사에의 참석 호소.”(2월 26일).

투고일: 2014.03.02.                      심사일: 2014.04.03.                      게재확정일: 2014.04.06.
--

【ABSTRACT】

## The Use of National Memorial Days by President Syngman Rhee: The National Rituals to Make an Anti-Communist Nation

Kang, Jung In | Sogang University

Han, Yu Dong |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how that President Syngman Rhee used national memorial days to make South Korean people an anti-communist nation by designating and celebrating national memorial days. The Rhee regime continuously instilled anti-communism by designating specific days related to the Korean War as national memorial days. Furthermore, the regime added anti-Communist consciousness to national consciousness by reminding South Koreans of the Korean War experience, i.e., the North Korean Communist war atrocities, on preexisting national memorial days such as March First Movement Day and the National Liberation Day(August 15th), which had originally nothing to do with anti-communism. Anti-Communism was naturally absorbed and internalized among residents in South Korea by such maneuver. In sum, national memorial days which were celebrated in the 1950s and featured with anti-Communist discourses were converted into occasions to make an anti-communist nation with the observance of solemn national rituals.

---

**Key Words** | national memorial days, anti-communist nation, Syngman Rhee, the Korean War, anti-communism, nation, ideological homogeneity